

“금속노조는 조합비 회계공시 전면 거부한다”

12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각오 했다”

금속노조가 윤석열 정권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조합비 회계공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3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의 노조탄압, 조합비 회계공시 전면 거부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조합비 회계공시를 악용해 노조를 악마화하고, 자주성을 훼손해 노동조합을 무너트리려 한다”라고 규탄했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노조탄압용 회계공시를 단호히 거부한다”라면서 “정권의 탄압을 뚫고 노동조합을 온전히 지켜야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회계공시 거부는 투쟁의 시작이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각오를 했다”라며 “금속노조 투쟁 의지를 3월 20일 서울 도심 투쟁 선포식으로 입증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금속노조는 매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예결산 등 재정 상황을 10원 한 장까지 투명하게 공표한다”라면서 “특활비를 지원받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한 번이라도 세금 사용

명세를 상세히 보고한 적 있는가?”라고 꾸짖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 강요는 조합원들에게 회계를 공표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추가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ILO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법률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부당하게 회계공시를 세액 공제에 결부해 노사자치를 훼손하고 노동자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라며 “정당한 회

계공시 거부에 민주노총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8일 58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조합비 회계공시 거부와 노조탄압 대응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는 3월 20일 서울 도심과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선포식을 거행한다.

금속노조,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총선요구 밝혀

13일 국회 기자회견 ... 산단 정책 참여, 다단계 하도급·고용허가제 폐지 시급

금속노조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제조업 노동자의 요구를 의제화하고, 새로 구성하는 22대 국회에 법제도 제정·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3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제조업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금속노조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조선하청·이주노동자 총선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32만여 명에 달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외면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극악무도하게 탄압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22대 국회가 제조업 사각지대 노동자의 요구를 받아 중요 입법 과제로 삼도록 금속노조가 앞장서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재영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장은 “부평공단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공단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오로지 자본을 위한 개발정책만 강행하고 있어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라고 토로했다.

이재영 지회장은 “노동자는 국회의원 선거 들러리가 아니다”라면서 “노동자가 산업단지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공식 참여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최민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장은 “보수언론이 칭송하는 조선업 상생협약에서 하청노동자는 배제당하고, 오히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확대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을 이주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대응한다”라고 비판했다.

김희정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최근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적극 활용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라면서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상습 임금체불, 폭행 등 이주노동자를 속박하는 주범이다”라고 성토했다.

김희정 지회장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165,0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다. 노동력 말고 사람을 향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3월 셋째 주부터 정당, 산업단지, 조선소가 있는 주요 지역 선거구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회신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